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누가 크고 사나운 늑대를 무서워하나?



인톤솔트
코리아컨설팅 대표

세계 곳곳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요근래 부쩍 안부를 묻는 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김정은의 섬뜩한 협박에 대한 충격적인 머리말과 기사로 가득찬 독일 온라인 뉴스를 읽는 것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뉴스는 북측의 항후 동향보다는 태평스럽게도 K팝과 스포츠에 관해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듯해 보이니까 했다. 이 나라는 북한의 가능할지도 모를 잠재적 핵공격과 전쟁 도발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1994년부터 대부분 한국에서 살아오고 있는 나로서 느끼는 위협 또한 한국이 직면한 공포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같다. 그야말로 전쟁의 위기감을 달리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에 대해 실로 무서움을 들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

망했을 당시의 소요를 기억하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일 하루 전 한국에 막 도착했던 나는 사연을 제대로 모른 채 당시의 야단법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추후 어쨌든 지금보다 더 걱정스럽긴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의 압살단이 국경을 넘어 북한산까지 추격당했던 일 또한 기억한다.

지난 20년에 걸쳐온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북측의 위협으로 있어왔던 모든 분쟁과 소규모의 충돌은 나의 공포심을 짐차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이번엔 받고 있는 안부 질문에 대해 요즘 나와 나의 가족은 잘 있으며 피난처로의 구조를 위한 어떤 망명도 찾고 있지 않다고 이메일과 전화로 답하고 있다.

위험한 지역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공포를 적게 느끼는 것 같은 우리네 삶은 그래서 더욱 신기한 모습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특히 근래, 한국에서보다 북한에 대한 불기사가 더욱 많다.

한국의 승려들과의 인터뷰와 통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거대한 로켓을 올려놓고 있는 김정은의 이미지가 커버로 실린 독일 유력 시사 주간지인 ‘스피겔’지(주당 100만 부 발행)까지 어디고 빠지는 곳이 없다. 어떻게 이 계속되는 북측의 위협 이벤트에 대해 한국과 서양측의 시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던 말인가?

어쩌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습하듯이 실제로 어떻게 북한이 움직이는지에 대해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포심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완전히 비이성적이며 거의 자폭하는 듯해 보이는 북한의 도발 상황은 한국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던 북한의 위협과 공격 중 그저 지나가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보는 것일까?

심각하게 따지고 보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가? 누구도 아니다. 결국엔 북한조차 국가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척 행동해서 지속적인 글로벌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 겁을 주고 국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결국에는 말쑥하게 계획된 전략인 셈이다.

다행히 북한에서는 발견된 석유가 없어서 얻을 것이 없는 북한을 미국이 공격하는 것을 내켜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건 대 김정은은 그걸 모르는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내 소견으로는 어쨌든 이 한반도의 위기가 유로 위기와 그 밖에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서구 사람들에게 당장 그들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뵈으로써 조금의 위안을 얻지는 않나 싶다.

이러한 내 추측이 서구 미디어들이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일을 선전하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 봐야할 질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울한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그토록 관심을 두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전쟁이나 전쟁이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교착상태를 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다. 이러한 일이 영원히 되풀이되어 김정은의 아들이나 딸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해서 그 뒤를 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독일에서처럼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다.

한국의 이 같은 속제는 아마도 전쟁에 의해서나 외교에 의해서만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그 문제를 풀어내는 길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북한에 대응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곧 보게 될 것이다.

크고 나쁜 늑대를 죽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면 그 누구도 그건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늑대를 길들인다는 것은 가능한 한 걸까? 여성적인 손길로 그 같은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다.

社說

순천정원박람회 D-2 ‘지구촌 축제’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구촌’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20일 개막해 10월20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총면적 111만2000㎡에 마련된 박람회장에는 풍력동 일원 주 박람회장과 오프동 일원 국제습지센터, 수목원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뤄진 260만㎡의 순천만은 박람회장에는 직접 속하지 않지만 박람회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된다.

순천정원박람회는 1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6700억 원의 부가가치, 1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경·화훼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순천만과 함께 생태관광 허브로 자리 잡아 남해안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조형물 위주의 산업박람회와 달리 정원박람회장의 수목은 시간이 갈수록 울창해져 순천시민은 물론 전국민의 생태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D-2인 현재 박람회장을 비롯한 수목원과 각종 부대시설이 모두 완료됐으며, 도로와 시가지 등도 정비를 마쳐 손꼽힐만한 남겨놓고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꽃과 수목은 환상적이고, 문화에 솔프로그래프도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박람회조직위, 전남도, 순천시 가 행사 자체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람회 기간 비축 긴장하고, 행사 비용을 절여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속히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부족한 숙박시설 보완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민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며, 바가지 요금 자체 및 승용차 안타기 등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인구 28만의 중소도시 순천이 세계의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국제적 생태도시로서 부상하는 것은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성공 개화를 이루어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 잡는 응급구조 체계 이대론 안된다

병원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중 응급처치 장비를 활용할 전문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아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조치를 맡고 있는 119 및 사설 구급대가 전문인력과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응급구조사시스템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밤 곡성군 겸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서 곡성 모 병원 소속 구급차 운전기사 A씨가 급성 간질 환자인 B씨를 태우고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가던 중 곡성 119 안전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자 119 안전센터는 10분 만에 출동해 B씨를 응급처치한 뒤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B씨가 피를 토한 뒤 심장 정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엔 제세동기·산소통·혈압기·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정작 반

드시 동승해야 할 전문 의료진은 없었고, 간호조무사만 동승했다고 한다.

병원측은 병원에서 출발하기 전 의료진과 대화를 나눌 정도여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후송하면서 이토록 허술하게 조치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부실한 응급후송체계가 소중할 목숨을 앗아간다는 지적을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족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니 어불성실성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119 및 사설 구급대가 전문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갖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의료칼럼

간염으로 발전하는 B형간염



홍 경영
광주기독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형간염은 우리 몸속의 간세포가 손상을 입어 특별한 증상이나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가 진료한 한 환자의 사례만 봐도 B형간염의 조용한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이 환자는 몇 달째 지속되는 만성피로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다. 수직간염으로 인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했지만 아직 나이도 젊고 약간의 피로감 외에는 별문제가 없던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간 손상이 상당히 진행해 간경변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검사 결과에 환자는 꽤나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처럼 B형간염은 병이 어느 정도 악화되기 전까지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 환자들이 이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B형간염은 인종에 따라 감염 바이러스 유전자형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A에서 H

까지 8가지 종류가 있다. 특히 국내 환자의 98%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C형은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이 빠르고,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30~100배 높고, 실제로 간암환자의 70~80%가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다. 만성 B형간염 환자가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10년, 20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9%, 23%, 48%로 알려져 있으며, 간경변증 환자의 간암 발생률은 5년, 20년이 경과할 때 각각 2.7%, 4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몸에 침투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정기검진과 올바른 치료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간경변증, 간암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B형간염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에서 특별한 기별이 안 와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 미리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B형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 잠복기에서 체내 B형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급격히 활발해지는 위험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한간학회에서는 간호소수치, 바이러스활성화수치, 간초음파 검사 세 가지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성 B형간염은 평생관리가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내성 발현율이 낮고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좋으며,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도 없는 B형간염을 매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트로이목마 약성코드처럼 잠복기를 거쳐 우리 몸에 침투한 인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바이러스 증식으로 인해 간에 기별이 오는 순간,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간이 파괴된 뒤일 수도 있다는 점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

기고

도서지역 복지, 이대로 좋은가?



박 민 서
천사1004의 섬 신안복지재단 이사장

뜻물을 음용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도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도시보다 노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족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도서지역의 복지환경은 어떠한가?

필자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종합복지회관 등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거나 계속 신축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종일 텅 빈 복지관의 모퉁이에 모여 TV만 바라보는 노인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도시와 달랐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하는 등 의료서비스가 확충되었음에도 일부 낙도지역에서는 요양서비스가 시급한 노인이 이동거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서비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서비스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웬만하면 섬에는 보건소가 있어 일반적 진료나 예방접종, 방문간호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문적 진료를 요하는 경우 물론로 나와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시

급을 다루는 위급환자 발생 시 큰 곤란을 겪기도 한다.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노인,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장애인,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추위와 비바람을 감당기 어려운 주택환경, 비위생적 화장실 구조 등 방치에 가까운 생활, 그 실상은 안타깝다. 이와 같이 도서지역 곳곳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 열악한 환경의 개선 없이 시설만 늘려간다고 도서지역 복지가 증대되었다 말할 수 있겠는가?

복지는 휴먼서비스이다. 도서지역은 사회복지 인력이나 민간 조직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그 역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지역 주민 중 복지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지역의 감정인 조직화된 주민자생단체들이 서비스전달체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이들에게 전문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질적 수준의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농가사업 지원과 자원봉사 실적을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상시 존재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서의 복지서비스는 여타 지역과 달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체계화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도서의 사회지표 개발과 데이터 확보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기관 간의 체계적 연결망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섬이기에 국민 대다수가 누리는 권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섬’이 부상하는 신해양시대이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잇는 연륙교의 건설로 도서지역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섬의 시대! 도서지역의 진정한 발전과 도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다.

2차 교통사고 부르는 도로위 시비 그만 합시다

운전중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그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도로 한복판이며 차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

전사고 예방보다 대부분 차량사고의 가해자가 어느 쪽이나, 내가 더 잘못한 거 아니냐는 쪽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런 위험을 잊게 된다.

그것도 일반 국도보다 고속도로 사고가 몇 배나 더 위험하며 뒤따르던 차나,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다음 사고 즉 ‘2차 사고’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통 사고 때는 운전자가 탑승객 모두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차가 방패역할을 해주지만, 차 밖으로 나오면 그런 방패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늘었는데 운전자 두 사람이 밖에 나와서 도로 한복판의 차와 차 사이에서 과실을 따지는 이런 일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일단 최대한 빨리 차량에서 빠져 나와야 하고, 뒤따르

는 차가 설명 급정거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뒤에 따라온 차들이 두 번째 차량을 추돌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 역시 고속도로에서 나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속 100km 기준으로 1초에 27m를 가기 때문에 앞의 사고현장을 그대로 들이박을 수 있으므로 항상 속도뿐만 아니라 50m혹은 100m의 안전거리를 지키는 운전습관도 중요하다. ▲니윤성·광주시 남구 봉선동

無 等 鼓

울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3% 내외 성장에 그치고 장기적 성장추세도 꺾이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명품 구매자 1000명 가운데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이 81.2%에 달했다. 비싸면 구입을 안해야 하지만 특정한 명품 가방구입을 위해 2년을 기다리고, 급행료까지 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들은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라다는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사피 아노’라는 라인 가격을 23%나 인상했고, 에르메스도 2년 동안 기다려도 사지 못할 정도로 인기 절정인 ‘켈리 35’를 921만 원에서 1053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철저히 비쌀수록 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명품을 평균 1~3개 갖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37.9%, 4~5개(22.4%), 6~10개(21.9%)였으며 11~15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이들이 연간 사들이는 수입 명품은 평균 1.93개씩 1년에 2개 정도의 명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수입 명품 1개당 평균가격은 가방이 200만원, 지갑이 64만원, 벨트 48만원, 신발 68만원, 의류 84만원, 시계는 41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품 구매자 1000명 가운데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이 81.2%에 달했다. 비싸면 구입을 안해야 하지만 특정한 명품 가방구입을 위해 2년을 기다리고, 급행료까지 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들은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라다는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사피 아노’라는 라인 가격을 23%나 인상했고, 에르메스도 2년 동안 기다려도 사지 못할 정도로 인기 절정인 ‘켈리 35’를 921만 원에서 1053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철저히 비쌀수록 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명품을 평균 1~3개 갖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37.9%, 4~5개(22.4%), 6~10개(21.9%)였으며 11~15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이들이 연간 사들이는 수입 명품은 평균 1.93개씩 1년에 2개 정도의 명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수입 명품 1개당 평균가격은 가방이

200만원, 지갑이 64만원, 벨트 48만원, 신발 68만원, 의류 84만원, 시계는 41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품 구매자 1000명 가운데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이 81.2%에 달했다. 비싸면 구입을 안해야 하지만 특정한 명품 가방구입을 위해 2년을 기다리고, 급행료까지 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들은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라다는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사피 아노’라는 라인 가격을 23%나 인상했고, 에르메스도 2년 동안 기다려도 사지 못할 정도로 인기 절정인 ‘켈리 35’를 921만 원에서 1053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철저히 비쌀수록 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명품을 평균 1~3개 갖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37.9%, 4~5개(22.4%), 6~10개(21.9%)였으며 11~15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이들이 연간 사들이는 수입 명품은 평균 1.93개씩 1년에 2개 정도의 명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수입 명품 1개당 평균가격은 가방이

팔리는 ‘베를렌 효과’를 노려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명품을 쓴다고 해서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가치소비를 늘려 해외 명품브랜드들이 더 이상 한국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취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이케팅국 227-9600 <F A X 227-9600> 디지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